

統一情勢分析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동향

2004. 7

정영태(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진욱(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형중(평화안보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재진(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교덕(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 일 연 구 원

- 목 차 -

I. 정치 분야 동향	1
1. 선군정치의 지속	1
2. '선군사상'론의 전개	1
3.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	2
4. 김정일에 대한 충성 요구	3
5. 주민생활 향상 노력	3
6. 사상교양 강화	3
II. 군사 분야 동향	4
1. 통상적 활동 지속	4
2. 미국의 군사적 위협 강조	5
3. 대남 군사적 조치에 합의	5
III. 외교 분야 동향	6
1. 자국 입장 관철 노력	6
2. 대미 압박 및 대일 반발	7
3. 외교적 고립 탈피 노력	8
IV. 경제 분야 동향	10
1. 주요 동향	10
2. 부문별 경제 사정과 동향	10
가. 식량 및 생필품	10
나. 전력 및 기간산업, 사회기반시설 부문	12

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부문	13
라. 대외경제관계	14
3. 평가 및 전망	15
V. 사회·문화 분야 동향	17
1. 사회통합 노력	17
2. 생산성 향상 촉구	20
3. 주민생활 변화	21
4. 주민의식 변화	23
VI. 대남 분야 동향	26
1. 당국간 ‘민족공조’ 요구	26
2. 남한 정국에의 영향 시도	27
3. 총선 이후의 대남공세	28
4. 적극적인 민간교류와 당국 차원에서의 대남 협조	29

I. 정치 분야 동향

1. 선군정치의 지속

- 김정일은 대규모 군 승진인사, 군부대 방문 등 여전히 군대의 절대적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선전당국은 선군정치의 합리화에 주력
 - 2004년 6월 현재 김정일의 군관련 활동은 32회로 총 공개 활동 46회의 70%를 점유¹⁾

<'98년 이후 연도별 김정일 공개활동 현황, '04.6.25 기준>

연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총 활동	40	32	45	60	51	46
군관련 활동	26	12	25	22	37	32
점유율(%)	65	38	56	37	73	70

- “선군정치는 백두산 위인들의 계속혁명 사상과 의지, 총대중시전통의 빛나는 계승이며 발전”으로 선전

2. '선군사상'론의 전개

- 통치이데올로기로써 주체사상이 김일성 유일체제를 지탱해 온 것²⁾과 같이 김정일 유일체제를 정당화하고 담보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의 선군사상을 대대적으로 전파·보급

1)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699호」.

2)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 비평사, 1995). p. 63.

- 선군사상을 “주체사상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 규정
 -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 사상”으로까지 미화
- 최근에는 ‘선군시대’, ‘선군단결’, ‘선군통일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할 것을 역설
 - ‘선군단결’에 대해 “총대를 잡은 무적강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군대를 기둥으로 하여 온 사회가 총폭탄·결사수호정신의 일치를 이룬 조선의 일심통일체”라고 주장(1.22, 노동신문)
 - ‘선군통일체’를 “선군명장을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총대동지들을 주력으로 굳게 뭉친 강철의 결정체”로 설명(6.16, 노동신문)

3.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

- 선군정치 찬양 가요 보급,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도 부각, 선군정치 주제 시·가요 창작, 선군사상을 반영한 만화영화 보급, ‘선군청년전위 열성자대회’ 개최 등의 조치를 통해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 추진
- 『전당사상일꾼대회』(2.26-27)에서 선군시대 당사상사업의 ‘혁명적 전환을 위한 과업’을 토의
 - 동 대회를 통해 선군사상 중심의 ‘사상적 일색화’를 집중적으로 강조
 - ※’74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체계화·정식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였음에 비추어 최근 ‘김정일주의’라는 표현 사용과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김정일에 대한 충성 요구

- 주요 정치행사를 통해 김정일 중심의 일심단결과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충성을 요구
 - 김일성 92회 생일(4.15)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정일의 총대중 시사상과 선군정치 확립 등 혁명업적 계승 집중 부각
 - 김정일 당사업 개시 40돌(6.19) 중앙보고대회에서는 김정일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확립’을 통한 당과 군대의 혼연일체 확립을 강조

5. 주민생활 향상 노력

- 7·1조치를 포함한 경제분야에서의 개혁 조치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내각의 역할 강조 및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2차 회의(3.25)를 헌법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내각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역설

6. 사상교양 강화

- 개혁적 조치 이후 자본주의 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주민 및 병사들의 사상적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상교양 강화
 - '70년대 당시의 사상투쟁 분위기를 상기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에 대응

II. 군사 분야 동향

1. 통상적 활동 지속

- 자원부족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동계훈련('03.12.1-'04.4.30)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은 생략한 채 '자원절약형 훈련' 방식으로 진행
- RSOI/FE(3.22-28)에 대응하여 등화관제 등 민방공훈련을 실시하고 군에 대한 지속적 사상교육 실시
 -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략증강' 등에 대해 '새로운 조선침략전쟁 계획'의 일환,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 강화
- 4월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접적지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 '태양절'에 즈음하여 승진인사(소장→중장: 8명, 대좌→소장: 65명)를 단행, 군의 사기진작과 절대적 충성을 유도
- 동계훈련을 마친 지상군은 5월 이후 영농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가운데 일부 부대는 전투준비 판정검열과 하계훈련(6-10월)을 준비

2. 미국의 군사적 위협 강조

- 김정일의 62회 생일(2.16) 기념 중앙보고대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 선포'(74.2.19) 3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등에서 긴장정세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강경대응을 천명

-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맞서 김정일 중심의 단결과 군민일치 촉구
- “적들의 총에는 대포로 맞서며,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여 반미대결전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

3. 대남 군사적 조치에 합의

- 두 차례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1차: 금강산, 2차: 설악산)에서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합의

Ⅲ. 외교 분야 동향

- 상반기 북한 외교는 후세인 체포 및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전개

1. 자국 입장 관철 노력

-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완화와 함께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
- 2차 6자회담(2.25-28) 개최에 앞서 ‘첫 단계 행동조치’ 수용을 미국 측에 재차 촉구(1.5-6,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함으로써 미국에 대하여 대북 강경 자세 포기과 북한의 주장 수용을 요구
- 2차 6자회담에서는 핵무기계획 포기 의사 및 안전보장 등에 대한 신축적 입장을 통해 ‘동결 대 보상’안 관철을 시도
 - 차기회담 일정 및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6자회담의 모멘텀 유지
- 2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5.12-14)에 참석,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요구 및 CVID 수용 불가 입장 견지
 - “인내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6자회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담의 진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철두철미 ‘동결 대 보상’안을 주장

- 3차 6자회담(6.23-26)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경제제재 해제, 200만kw 전력에 상당하는 에너지 지원 등을 대가로 영변의 5MW 짜리 흑연감속로를 포함해 모든 핵무기 관련 계획 폐기를 언급

2. 대미 압박 및 대일 반발

-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한의 핵능력과 핵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압박
 - 지금까지 밝혀온 ‘재처리 완료’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방북(1.6-10)한 미 스탠포드대 루이스 교수 일행의 영변 핵시설 방문을 공개
- 동시행동원칙, 평화적 핵 활동 포기 불가 등 기존 입장 고수 속에 미국의 CVID 요구의 부당성 부각에 주력하는 한편, RSOI/FE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 “미국이 대화 분위기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
- 『뉴욕타임즈』가 제기(5.22)한 리비아와 북한 간 우라늄 거래설에 대해 “근거 없는 날조품으로 핵물질 전파자의 딱지를 붙이려는 비열한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비난(5.29, 조선중앙통신)
 - “미국이 아무런 과학적 증거자료도, 신빙성도 없는 허구적인 농축우라늄설을 집요하게 붙어대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5.31, 노동신문)
- 미·일 등의 『동북아 안보구상』 등에 대해서도 “동북아에서 당면 안보상의 과제는 적대관계·불신 해소를 통한 지역 나라들 사이의 신

퇴조성인 바, 이것이 없이는 다자안보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
(4.2, 노동신문)

- 한편 일본의 대북 강경조치 추진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
 - 일본의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전시법’, ‘개정외환법’ 입법 추진을 ‘대북압살 목적의 국제적 포위환 형성’이라고 비난
- 일본의 대북제재 법안 마련을 PSI 등과 연계시켜, 미·일 안보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 실행 가능성 차단 시도

3. 외교적 고립 탈피 노력

-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확보 및 외교적 고립을 방지
 -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 방북 시 김정일과의 면담(3.24)을 통해, 북·중간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확인함과 함께 실무그룹 발족과 관련한 양국간 의견 교환
 - 닝푸쿠이(寧賦魁) 북핵 대사 방북(3.13-16)
 - 김정일 방중(4.19-21)
- 핵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 및 비동맹국가 등과의 양자 관계 회복을 통한 국제적 고립 탈피 노력도 전개
-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체코·영국을 방문(3.10-18)
 - EU의 대북 인권결의안 추진에 즈음하여 핵·인권 문제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관계개선 모색
 - 의회외교 강화를 통해 EU내 대북 우호적 여론 조성 시도

- 이집트 정부문화대표단(4.17-20)과 체코 외무성 대표단(4.27-5.1)을 초청

- 북·EU 수교('01.5.14) 3주년을 전후로 정부·의회 대표단 및 민간차원의 상호 교류를 활발히 진행
 - 독일 사민당 플루그 연방의회 의원 일행(5.11-15), 폴란드 외무성 대표단(5.15-18), 영국 동아시아 연구소(EAI) 대표단(5.22-29) 방북
 - 궁석웅 외무상 부상 일행, 한반도 문제 세미나(5.19) 참석 위해 영국 방문

-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북(5.22)
 - “피랍 일본인의 북한 잔류가족 5명 송환, 일본인 피랍 의혹자 10명에 대한 재조사 추진, 식량 25만 톤 대북 지원” 등에 합의

IV. 경제 분야 동향

1. 주요 동향

- 2004년 경제정책 방향은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 보장’과 ‘인민생활 보장’

- 2002년 7월 전후로 실시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 범위 축소, 기업과 기관 등의 자율성 확대, 종합시장 개설 확대, 가두매대 설치 확대 등
 - 신년 공동사설과 최고인민회의(3.25)에서 내각의 권위 제고, 모든 단위에서 ‘당, 행정의 일치’ 보장, 재정운용에서의 실리를 강조

- 개방정책 탐색 지속
 - 수출 상품 전시회,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학습 사절단의 중국 파견, 경제관련 회의 참가, 개성공단 건설 가속화 촉구, 수출 촉진 등

- 원조무역 또는 보따리 장사 등을 통한 중·북 국경무역 양태를 넘어서 중국 기업의 대북한 상업적 교류 협력이 확대

2. 부문별 경제 사정과 동향

가. 식량 및 생필품

- 2004 곡물 회계연도에는 식량 사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작년도 곡물 생산량은 425만 톤으로 추정되는 바, 1993년의 427만 톤 생산 이후 최고의 생산량
 - 일본의 쌀 지원 약속 분 25만 톤과 한국정부 지원 40만 톤을 합하면 총 490만 톤을 확보할 것으로 추측
 - 여기에 국제사회의 기타 지원량 및 자체 상업적 수입량(2003년도의 경우 58만 톤)까지 합하면 일인당 500g을 기준으로 한 최소 수요량 540-55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
 - ※2003 곡물회계연도의 경우 최소 수요량 기준 총 곡물 수요량은 542만 톤, 총 공급량은 522만 톤이었음.
- 통일부는 2003년도 후반기에 쌀값이 200원선에서 안정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
- 올해 초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쌀값이 4-500원으로 폭등했으나, 2004년 중반기 260원선을 유지
-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지정리, 수로공사를 통한 식량증산과 고기 등의 부식물 공급 확대를 독려
- 이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은 식료가공공장(1.11), 평남도 토지정리사업(3.17), 군부대 축산시설(3.16, 4.5)을 현지도
- 감자·콩, 누에고치 등 공예작물 생산도 독려
- 최초의 감자농사혁명선구자대회(1.27), 두 번째의 「국제감자과학토론회」(6.18), 「전국여맹누에치기열성자회의」(4.27) 개최
- 한편 중국과의 수출입 물량 증대, 7·1조치에 의한 소비재 증산 효과 등으로 생필품난도 다소 완화되었을 것으로 평가

- 소비품 양·질제고 및 외화 절약을 위해 경공업 현대화 시범공장을 선정하고 주요 1차 소비품의 수입대체를 추진
 - 평양방직, 영변건직공장을 현대화 시범공장으로 집중 지원하면서 외제소비품 대체 의지 표명

나. 전력 및 기간산업, 사회기반시설 부문

- 2003년도 전력생산이 20% 증가했고, 금년에도 20%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 전력 사정이 여전히 어렵지만 일정 정도 완화되었을 것이며, 이것이 공업 생산 증대의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
- 한편 산업현대의 핵심부문인 기계공업 정상화를 독려
 - 김정일 위원장은 낙원기계공장(5.18), 구성공작기계공장(6.2), 청천강기계공장(6.3)을 잇달아 현지지도
 - ※성·중앙기관·각 도, 공장·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모범적인 구성공작기계공장 참관(6.10)
-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및 화력발전소 보수에 주력하면서 중·소형 조수력발전소 건설 및 송전망 보수 병행
 - 대규모 수력발전소 조기 완공 추진
 - 양강도 삼수발전소 착공
 - 북창, 평양, 동평양 등 주요 화력발전소 이외 10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 서해안 웅진군 조수력발전소, 평양시 송전선 보수공사 추진

○에너지·원자재 확보 및 외화 획득을 위한 주요 광업 생산 활성화에 주력

- 7·1조치 이후 누진성과급 실시, 오스트리아와의 기술협력 등으로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 생산 활발

- 무산·검덕 등 주요 금속광산은 매달 생산계획을 초과 완수하면서 대중 수출 확대

※금년도 1-3월중 대중 수출액이 전년비 철강 246%(25백만 불), 아연 2,900%(1백만 불) 증가

○평양시 중심거리 정비공사 완료(4.14), TKR/TSR 연결 및 철도시설 현대화를 도모하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 추진

- 평양대극장에서 3대혁명전시관에 이르는 중심거리의 도로포장, 상·하수도, 상업봉사망, 건물외장 보수

- TKR/TSR 관련 남·북·러 전문가회의 참가(4.28, 모스크바), 신형 객차 600량 생산, 콘크리트침목공장 현대화 등

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부문

○산업 현대화와 현장 중심의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강조

- 2004년 예산에서 과학기술부문 지출을 전년비 60% 증액

- 연구성과에 상응한 가격을 지불하여 연구의욕 제고, 중앙과학기술축전(4.4)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의 경쟁 유도

○IT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정비와 S/W프로그램 개발에 주력

- 「컴퓨터소프트웨어중재위원회」를 발족(5.15)시켜 S/W분쟁해결,

- 저작권보호, 해외 IT업체들의 투자여건을 개선
- 중국 심양에 『조선6·15심양봉사소』를 설립(3.26)하여 S/W·멀티미디어프로그램 등을 개발·판매

라. 대외경제관계

- 한국과 중국을 주요 대외경제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이 활발
- 국제전시회, 상품판매센터 개설을 통해 무역 확대 도모
 - 제7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최(5.17), 전국수출상품전시회 개최(5.18), 북-중 상품판매센터 개설(5.28)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광고규정 발표(3.5)
 - ※ 개성공업지구 중앙특구개발지도중국 등 북한의 남북경협 관계자들이 현대 아산 관계자들과 중국 상하이 등 시찰(5.25)
 -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설립운영, 세관, 출입·체류·거주 규정 발표(5.26), 외화관리·광고·노동규정 발표(5.29)
- 러시아·EU 등 유럽과의 경제협력관계 활성화 모색
 - 러시아와 전력, 철도, 건설, 농업, 임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임업협력협정 기한 연장에 합의(4.28)
 - EU 의회대표단이 방북하여 경제협력 협의(2.21),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체코·영국에서 시장경제학습(3.10)
 - 체코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4.27), 폴란드와 합작해운사 운영 논의(5.15), 스위스와 평스합영회사 조업(6.10)

-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 베트남에 경제시찰단(2월, 4월)과 금융연수단(5월)을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무역결제 업무협정』(3.5)과 『규격화·계량 및 품질관리부문 협정』체결(4.27)
 - 무역대표단이 말레이시아·태국을 방문하여 산업시찰 및 경제협력 확대 문제 협의(6.19)
 - 대표단(단장 양형섭)의 아프리카 4개국 방문(1.20), 제15차 북·리비아 공동위원회 참가(2.21), 북·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제2차회의 참가(3.31)
 - 1/4분기 대중 교역은 총1.9억 달러로 전년비 18.7% 증가
 - 단동 옥류관김치공장 설립(5.16), 조선올림운송합영회사 설립(5.27), 영초건재품합영회사 지붕재공장 조업(5.31) 등

- 김정일 방중(4.19) 이후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중국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발전상 지속 보도

3. 평가 및 전망

- 식량과 전력 등 가장 기초적인 물자의 공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 기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물자부족과 인플레이션은 지속

- 인플레이션 지속은 다음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 7·1조치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물자의 량이 증가 했는데, 이 부문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 심화
 - 일정 정도의 경제상황 개선 및 7·1조치 등으로 주민의 일반적인 기대(욕구)수준이 높아졌을 가능성

- 이와 같은 내부 사정 때문에 식량·소비품의 증산 및 수입 압력이 정책당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평가
 - 공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욕구수준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에 앞으로도 거시경제적 불안은 계속될 전망
 - 당국은 식량·생활품 부문에서의 ‘자유화’ 확대, 수출 증대를 통한 수입 증대, 대외개방 확대 등의 정책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

V. 사회·문화 분야 동향

1. 사회통합 노력

<사상교양 강화>

-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체제의 정당성이 실추되고 주민들의 사상의식이 해이해짐에 따라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유지하고자 노력
 - 7·1조치 시행과정에서 사상이 이완될 개연성을 차단하는 한편, 전쟁경험이 없는 전후 세대의 사상무장을 촉구·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 핵문제로 미·일 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의주 등 접경지역에서 반미·반일 계급교양을 한층 강화
 - 주민들에게 계급교양관 참관 및 영웅따라배우기 운동을 독려하면서 미제와 일제에 대한 결의모임 등을 전개
- 최근 신의주, 함흥, 강원 평강 등에서 계급교양관 참관을 독려하고 결의모임을 개최하는 등 주민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새세기 총폭탄영웅」 ‘김기봉’ 등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행
 - '04.2 군사훈련 중 대전차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많은 인명을 구하고 사망하였다는 군관 김기봉(31)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4.30, 조선중앙통신)

- 보도매체를 통해(2.9, 2.22, 3.15, 노동신문) 특히 청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강조
 -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 전선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할 세대가 청년들이라고 강조
 - 청년들의 운명은 영도자에게 달려 있으며, 청년중시는 김정일의 영원한 정치철학으로써 모든 청년들은 혁명1세대처럼 수뇌부 결사옹위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

- 사회주의건설에 청년들을 동원하려는 것 외에 청년들의 수령결사옹위 정신무장을 강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

<집단주의 강조>

- 배급을 중단한 이후 사회주의의 기초는 집단주의라는 논지의 주장 전개
 - “사회주의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집단주의”, “사회주의에서 집단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은 곧 사회주의를 버리는 것”이라면서 집단주의를 강조(5.17, 평양방송)
 - 시장의 확대에 따라 개인주의, 배급주의 등이 확산되자, 군·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방지하고 내부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평가

- 최근 “일심으로 굳건한 우리식 사회주의” 제하의 글을 보도(5.17, 조선중앙방송)
 - 사회주의 사회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전일체로 굳게 단결할 때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있다고 주장

-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함으로써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위력을 떨칠 것을 촉구

○향후에도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치사상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주의를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

<반일주의 재등장>

○금년 초부터 일본의 대북제재법안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

- 일본의 납치자 문제 제기 등에 대응하여 일본의 과거사 만행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사죄와 보상 등 과거청산을 요구
- 주민들, 특히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 대한 반제·반일 사상교양을 통해 체제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정

○최근 각지 영화관, 문화회관을 비롯한 영화보급망을 통해 기록영화 <역사는 고발한다>와 예술영화 <임진왜란>, <돌아오지 않는 밀사>, <피묻은 랍패>,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살아있는 영혼들>등 반일 주제의 영화들을 널리 상영

- “영화를 관람한 각 계층 근로자와 학생들이 일본반동들이 어제의 교훈을 망각하고 무분별한 재침의 길에 나선다면 선군으로 다져온 힘으로 침략자들에게 피맺힌 원한을 풀고야말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5.14, 조선중앙통신)

2. 생산성 향상 촉구

<강계정신 강조>

- 노동신문 사설 “강계정신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하자”(5.25)와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으로” 제하의 사설(6.9)을 통해 '90년대의 시대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과 '강계정신'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일의 영도업적을 선전
 - 김정일은 '96년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서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명명
- 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 군인정신'이 사회, 특히 경제단위에서 개화된 것이 '강계정신'
 -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과 더불어 '성강의 봉화'로 인해 수많은 발전소와 공장, 목장, 청년영웅도로, 광명성제염소 등이 건설되었으며, 광명성 1호를 발사할 수 있었다고 선전
- '혁명적 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산력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극대화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유도하며, 경제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외부사조 유입 및 사상적 이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문학작품을 통한 생산·근로의욕 독려>

- 각지 공장·기업소의 문학모임을 통해 문학예술 작품들이 널리 보급

되어 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어로 고무·추동하고 있다고 보도(5.28,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 전력공업부문 노동계급이 나라의 부강발전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열정을 안겨주는 노래와 시들을 애창 애송하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
- 각지의 탄전과 기계설비 제작 현장, 경공업공장 노동계급들도 조국사랑의 노래들과 이수복 영웅의 서정시 ‘나의 조국’을 새겨가며 새로운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고 있다고 선전

○ 한편, 문학신문 최근호(5.22) 사설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교훈적 내용에서 벗어난 작품 경향들을 비판

-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싸워 나가는 낙천적 기질은 선군시대 성격 창조의 중요한 속성이며 이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생활을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

○ 방송과 각종 문학모임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력 증대 성과를 적극 선전하고 작가들에게 ‘선군시대의 낙천적 기질’을 강조하는 것은 선군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작품창작을 독려하고, 이를 노동계급의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3. 주민생활 변화

<‘우리민족 제일주의 정신’ 고취>

○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67.5 김일성의 ‘봉건잔재 일소’ 지시에 따라 민속명절 행사를 전면 금지해 오다가, 김정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 강조와 함께 ’89년부터 설·단오·추석을 3대 민속명절로 정하고 휴무일을 실시

- ’03년부터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단오를 수리날로, 추석을 한가위로 고쳐 부르게 하였으며 수리날의 풍습소개 등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관심을 선전
- 금년에는 김정일의 당중앙위 사업시작 40돌을 맞아 단오행사도 평양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다채롭게 진행
 - 평양에서는 씨름경기, 윷놀이, 민족음식품평회 등 각종 민속행사와 함께 예술소조원들이 공연
 - 청진시에서는 민족음식찾기 등을, 함흥시에서는 조선옷 자랑무대, 민족음식품평회 등을 실시
 - ’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황소상 전국근로자 텔레비전 민속씨름경기 대회를 청장년 선수들의 비교씨름과 60청춘 씨름경기로 나누어 진행
- 이와 같이 단오를 맞아 다채로운 민속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선전하는 것은 민속명절의 강조를 통해 ‘우리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선전 고무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상이완을 차단, 결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

<여성들의 지위 향상>

- 주민들의 경제생활에서 시장경제가 정착됨에 따라 시장에서 장사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가정 내 지위가 향상

- 공장·기업소에 출근하지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남성들은 여성에 비하여 가정 내 발언권이 약화되는 경향
- 남편은 ‘불편’, ‘집지키는 멍멍이’라는 은어가 유행

4. 주민의식 변화

○북한 당국의 사상교양과 사회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가치의식과 사회의식은 빠르게 변화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 확산>

○주민들은 2002년의 7·1조치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따르는 새로운 개혁·개방으로 기대하였으나 점차 기대에 못 미치자 정부와 지도자에 대해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개혁·개방을 더욱 요구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눈부신 발전을 향후 북한이 나아가야 할 모델로써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

<자유화 바람의 확산>

○2002년 7·1조치 이후 주민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암시장에서의 장사행위가 양성화되어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점

- 공산품 매매를 허용하는 종합시장의 설치로 매매의 품목과 양이

확대됨에 따라 상품의 거래와 더불어 외부정보의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

○특히 공산품 거래의 허용으로 TV, 녹음기 등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었고 외부의 영화와 비디오의 거래도 증가

○종합시장에서 구매한 신형 외제 TV로 평양-함흥 이남 지역에서 수신되는 남한의 TV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

<사상성에서 돈 중시 및 물신주의로의 변화>

○무상배급제도의 폐지, 임금노동제 및 종합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의식은 크게 변화

- 7.1조치 이후 물가의 급등, 시장에서의 물품 구매, 현물배급제에서 화폐경제로의 완전 이행 등으로 돈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변화하였고, 물질 우선의 사고가 강화됨으로써 사상이나 이념은 2선으로 후퇴

<국가 의존적 의식의 약화와 개인 자력갱생적 의식의 강화 >

○배급제도 붕괴이후 생계를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는 등의 국가의존적 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추세가 심화

- '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재개될 것이라던 생각이 배급제 공식 폐지 이후에는 경제가 호전되어도 배급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화

○자력갱생 의식은 장사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부분이 공식부문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돈을 버는 길은 장사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임.

VI. 대남 분야 동향

○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를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대남공세를 전개한 것이 상반기 동향의 특징

1. 당국간 ‘민족공조’ 요구

○ 2004년에 들어 ‘민족공조’라는 구호 아래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를 실천”하도록 요구

- 이전까지 구호의 성격이 강했던 ‘민족공조’의 요구가 민간차원에서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반미, 남북협력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

○ 제13차 장관급 회담에서 김령성 북측 단장은 “민족공조에서 기본은 책임 있는 당국자 사이의 공조”라고 강조

- 남북관계의 전진을 방해하는 주범은 미국이므로 미국에 반대하면서 남북협력을 강화하자는 요구

○ 당국 공조의 주요 과제로 핵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 지지와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

- 핵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체제의 해체 요구
-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키지 않는 남한 당국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요구³⁾

3)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간 협력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미국의 핵 소동에 가담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극렬 비난 (『평양방송』, 3.8)

- ‘민족공조’ 주장은 대북 경협 및 지원의 명분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에 팽배해진 반미 감정에 편승하여 미국을 화해·협력의 방해 주범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한·미 공조 이완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분석⁴⁾

2. 남한 정국에의 영향 시도

-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의 실천과 당국간 공조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에 실망한 상황에서 탄핵정국이 벌어지자 적극적 공세 전개
- 정부가 발표(3.4)한 안보정책 4대 전략기조 중 ‘협력적 자주국방’,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3.22-28)에 대해 ‘반공화국 압살책동’에서 기본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북침을 위한 대규모 전쟁소동이라고 비난
 - 안보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시켜 국론분열을 시도하는 한편, 민족공조론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 ‘탄핵소동’이 남한 내부 문제로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미국과 그 하수인들인 보수야당에 의한 의회 쿠데타’로 비난

4) “남조선의 민심은 반북대결에서 연북화합으로, 친미에서 반미로 돌아서고 있으며 그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통일신보』, 6.5)하면서 “민족공조력량, 통일에국력량이 비할 바 없이 장성장화됨에 따라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 대 남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으로 되는 역사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로동신문』, 6.15)

- 총선에서 극우보수세력을 심판하고 진보개혁세력에게 표를 주어 정치를 일신시켜야 한다고 선동
 - 탄핵을 반대하는 남한 민심에 동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호의적 여론 조성을 시도하는 동시에 보수세력이 득세할 경우 남북경협에 소극적이고 핵문제 해결에서도 대북 압박책 구사 가능성을 경계

3. 총선 이후의 대남공세

- 4·15 총선결과를 “6·15 공동선언의 승리이며, 인민대중이 반민주세력과의 투쟁에서 거둔 승리”라고 강조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 선동
 -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파병 저지, 미군철수 등을 주장
- 국가보안법은 “우리민족끼리의 시대에 용납될 수 없는 파쇼악법이며, 민족화해와 통일에 결정적 장애물”이라고 주장하고 구속학생 석방과 보안법 철폐 투쟁 선동
 - 『조평통』서기국 보도 868호(5.5), 869호(5.6), 『범민련』북측본부 대변인 담화(5.4), 범청학련북측본부 성명(6.7), 민화협 성명(6.9), 조선학생위 성명(6.11), 범민련북측본부 성명(6.12) 등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
- 이라크 추가파병안 국회통과와 관련,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매국세력’에 대해 비난하는 등 반미·자주화 투쟁을 촉구
 - 미군의 이라크 포로학대에 대해 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때에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비난(5.14,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새 것을 지향하는 남조선 인민들 앞에 나서는 급선무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끝장내는 것”이라 주장(5.19, 평방)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근본적인 과제로 제기
 -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선전(5.14, 조국전선 중앙위·조평통)
 - 주한미군 전력증강 및 재배치, 주한미군 일부의 이라크 파견 등을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범죄적 기도라고 하면서 ‘민족의 공멸방지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투쟁’ 촉구

4. 적극적인 민간교류와 당국 차원에서의 대남 협조

- ‘민족공조’ 아래 적극적인 민간교류 행사 추진
 -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공동학술회의(2.24-2.28, 평양) 및 「2004년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5.1, 평양), 제6차 「평양의 학과학토론회」(5.3) 등 개최
 - 남한에서 개최된 「우리민족대회」(6.15)와 「국제토론회」(6.14-15) 등에 북한 고위인사 등 대표단 파견
- 탄핵정국과 총선이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해결되자 남북한간 북핵문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던 태도에서 벗어나 6자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남북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6자회담에서 남한의 제안과 역할을 인정
 - 회피해 왔던 군사회담도 수용하여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에 합의
- 남한 이외에 경제적 지원을 해 줄 나라가 없고 미국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자도 필요한 상황인 바, 남북간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공조'를 요구하는 대남 공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안보측면에서는 한미공조 해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반복
 - 경제측면에서는 핵문제와 관계없이 경협이 진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리확보 추구 시도